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내용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충남대학교 총장

1. 사업개요

1-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지정시기) 2022년도는 8월 중 지정 예정, 지정일로부터 4년간

1-2. 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 (신청기관) 대전·세종·충남 지역협업위원회
- (전담기관)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 (참여대학) 충남대학교 등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사업 24개 참여대학
 - * 충남대, 공주대, 순천향대, 한기대, 한밭대, 선문대,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충남도립대, 한남대, 호서대, 고려대(세종), 대전대, 대전보건대, 백석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한서대
- (핵심분야)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
- (지정 필요성)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은 3개 지자체, 24개 지역대학, 81개 기업 및 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를 통한 미래모빌리티 혁신생태계 조성을 사업목표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 ☞ 모빌리티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종합적인 고등교육 혁신이 필요함

2. 규제 특례 요청사항

2-1. 개요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교육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학사 운영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공유대학의 대표 학장이 학위 수여	24개 참여대학
2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사 운영	모빌리티 분야 참여대학(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 이동수업 장소를 ‘대학이 지정한 장소로 할 수 있음’ 으로 지정	24개 참여대학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②항 9호	학생 정원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정원의 편입학의 모집단위를 융합전공으로 확대하고, 인원은 공유대학 융합전공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함	24개 참여대학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사 운영	국내 타 대학에서 수업 이수 시,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24개 참여대학
5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학사 운영	오픈캠퍼스 등 공공기관 지역균형인재 채용 의무화 대응을 위한 현장실습 시 표준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적용 및 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24개 참여대학
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학사 운영	지역선도기업과의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24개 참여대학
7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④항	기타 (교육용 기본 자산)	교지 밖에 2Km의 거리가 넘는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교지 및 교사 시설을 재학생 외 지역의 청년, 중장년,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시설로 활용토록 특례	24개 참여대학
8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기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강사 임용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일명 강사법) 적용 예외	24개 참여대학
9	자율주행 로봇 실증 교육과정 특례	학사 운영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교육과정 운영시 도보(인도) 통행 등 특례 마련	24개 참여대학

2-2. 규제 특례 요청사항(세부내용)

1) 공유대학 대표 학장의 학위 수여

○ 규제현황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대학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로 학위 수여 가능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공유대학은 다수의 대학이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공유대학의 대표학장이 참여대학을 대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기존 공동학위는 대학-대학 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공유대학은 다수의 대학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기존 공동학위의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방식과 상이
- 현 규제가 지속된다면 24개의 참여대학의 명이 학위증 하단에 모두 표기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편함이 발생하고, 기존 공동학위 방식을 활용하여 융합전공을 대표하는 주관대학과 학생 원소속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공유대학이라는 신개념 교육혁신모델 방안의 취지를 흐릴 수 있음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공유대학은 대학, 기업, 연구소, 지역사회 등이 가진 교육 자원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각 대학의 교육, 연구, 특성화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지역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가상의 플랫폼 또는 대학 생태계를 의미함
- 지금까지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이 생존을 위해 경쟁해왔으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 대학이 수평적 관계에서의 논의를 통해 상생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공유대학은 그러한 지역혁신플랫폼의 대학교육혁신 방안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대학 및 지역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표 공유대학장의 명의로 학위를 주는 것은 지역혁신플랫폼의 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가상의 플랫폼을 실체화하는 방안이라고 봄

2) 모빌리티 분야 참여대학(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 규제현황: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제특례

- 대학의 수업은 설립·인가된 장소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산업체 위탁교육과 계약학과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 밖 수업 허용**

* 일반 대학(원)의 학교위치, 분교 규정 등을 통해 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 금지(고등교육법 제4조·제24조, 시행령 제2조)

** 재직자 대상의 산업체 위탁교육과 계약학과 강의는 학교 밖 시설(산업체 무상 제공시설)에서 개설 가능(고등교육법 제40조, 산학협력법 제8조, 교육부 규정)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성과확산을 위해서 참여대학(참여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을 예외로 지정하여 특성화된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동수업 조건 완화
-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이동수업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동수업 제한요건을 허용하여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 이전과 달리 산업의 네트워크가 거리의 제한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 이동수업에 대한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고등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광역경제권 내에 위치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3)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 정원 외 편입학 모집단위 확대

○ 규제현황: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대학-전문대학간의 공유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편입학을 통해 공유대학(융합전공)을 운영하고자 하나 입학정원이 없는 융합전공으로는 교육과정 연계편입학이 불가하여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

※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학생은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사전 연계협약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전문대학 학생이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음

※ 모집인원: 3학년 입학정원의 3%(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모집

- 고등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대학-전문대학간 공유대학 운영을 위해 편입학 대상학과를 입학정원이 없는 공유대학의 융합전공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입학정원 정원(정원 외)을 신설하여 교육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기대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대학-전문대학 연계하여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사업 후에도 규제개혁의 효과 기대
- 전문대학-대학-기업(관)-지역사회의 인력양성 신 생태계 구축
- 교육모델과 플랫폼을 타 산업 분야에 확산을 통한 타 산업 인력 양성 촉진

4) 국내 타 대학에서 수업 이수 시 졸업학점의 4분의 3이내 인정

○ 규제현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내에서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소속 대학에 상관없이 DSC 공유대학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생이 본인의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진로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DSC 공유대학은 향후 학생이 주전공과 관계없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 그러한 점에서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대학 차원에서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면 앞서 논의한 DSC 공유대학의 중장기발전 방향으로 대학교육혁신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대학 간 학생과 교수 등 교육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통로로서 공유대학 활용 가능
- 교육부의 학사제도 유연화,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과 부합할 수 있음

5) 공공기관 지역균형인재 채용 의무화 대응을 위한 현장학습실기제 규제 완화

○ 규제현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30조

-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 수련 과정으로 운영함
- 위 원칙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 각 정부부처 등의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하면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모두 실시
- 대학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국고 및 지방비 지급 비율을 50%로 확대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목적은 지역인재를 육성,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현장실습시간의 25% 이상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면,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인재의 직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는 지역 내 공공기관 수요가 있고 대학-공공기관 간 오픈캠퍼스 등 지역인재 공동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6) 지역선도기업과의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 규제현황: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30조

-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 수련 과정으로 운영함

- 위 원칙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 각 정부부처 등의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지역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지역선도기업에 한하여 국고 및 지방비 지급 비율을 50%로 확대
- 기업은 학생이 현장을 경험하며,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대내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을 적시에 충원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현장실습생보다는 차라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임
- 이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현장실습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과 대학, 학생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규정 제30조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실습 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기관 요청 시 4분의 1 수준까지 실습지원비를 보조하고 있음
- 기업과 대학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위해선 기업과 대학 모두 인재 양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 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목적은 지역인재를 육성,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로 인한 비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지역 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없기 때문임
- 공공기관, 대기업 이전 등의 방법도 있지만 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지역이 자생적 지역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 이는 지역의 핵심산업 인재 양성, R&D 등 지역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봄

7) 교지 및 교사시설을 재학생 외 대상으로 창업지원시설로 활용

○ 규제현황 : 대학설립·운영규정

- 제5조제④항 대학이 기존 교지 밖에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하는 경우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교지 밖에 2Km의 거리가 넘는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교지 및 교사 시설을 재학생 외 지역의 청년, 중장년, 지역기업, 사회적공동체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시설(창업자 기숙사, 창업자 교육·연구·개발, 시제품제작 및 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4항의 교육용 기본재산 사용의 대상 및 목적이 대학의 재학생을 위한 직접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의 범위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 등이 대학시설 사용 가능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훈련(취·창업 및 연구개발 교육) 및 재교육 지원시설로 활용시 가능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제 해석이 필요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교육용 기본재산을 창업지원 시설로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수익 및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익성 확보
- 창업기업들이 교육용 기본자산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모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아이টে에 한하여 교육용 기본자산 활용 허가

8)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강사 임용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적용 예외

○ 규제현황

-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른 임용기간, 임금 등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1년 이상으로 임용하며, 임용 및 재임용 절차의 보장과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해 보호함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핵심분야 강사 신규 임용 시 강사법 적용 예외
- 실무능력을 갖춘 강사임용으로 양질의 교육효과 달성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핵심분야의 유연한 교원임용을 위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

9)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교육과정 운영시 도보(인도) 통행 등 특례

○ 규제현황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도보 등 이동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영상촬영 불가),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안전 통행 조치 근거 부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50조(공원 출입 불가)

○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필요성

- 미래모빌리티 실증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외부 카메라를 가진 자율주행 로봇이 규제 특례 지역 내에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 필요
- 자율주행 로봇이 외부 카메라를 통해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촬영이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자율주행 로봇의 실제 환경 대상 타당성 검증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운영

3.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2. 04. 04. ~ 05. 03.(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첨부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40,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3층)
 - E-mail: lsm9804@korea.kr
- 관련문의: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Tel: 041-631-6805)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규제특례 적용 내용)에 대한 의견서

☐ 제출자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연 락 처 :

☐ 의견 사항

대상 규제 특례:

상기 본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4. .

의견제출자 : (인)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귀하